

보도설명자료

('22. 7. 13)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정부 원전정책이 안전을 무시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안전확보”는 원전정책의 기본 전제이므로 정부는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할 것임
(7.13일자 한겨레신문 「윤 정부 ‘원전 드라이브’에 안전 무시 조짐 벌써 나타나」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윤 정부 ‘원전 드라이브’에 안전 무시 조짐 벌써 나타나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 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2050 Net Zero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것이 現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방향임
- 세계적으로 에너지안보 위기, 하계 전력난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 등 전기화 추세로 인해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확보 문제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따라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발전원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급할 것임
- ☐ 특히 원전정책의 기본 전제는 “안전 확보”로, 정부의 원전정책이 안전을 무시하며 추진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 정부는 원전의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 등 모든 측면에서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원전을 타 전원과 조화롭게 활용할 계획임

○ 아울러 ‘戰時’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발언을 안전을 경시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일부 주장은 잘못된 것임

- 원전산업 생태계의 어려운 상황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주문하면서, 관료적으로 늘 해오던 “안전한” 방식으로 일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는 취지임

○ 신한울 3, 4호기 건설 또한, 법령상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할 예정

- 환경영향평가도 환경현황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절차를 효율화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또한 EU Taxonomy 등과 세계적 정책방향을 감안할 때, “원전은 사양산업”,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① 세계 각국에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방향이 뚜렷해지고 있음

- '22.6월 현재, 세계 33개국에서 441기(39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17개국이 53기의 신규원전을 추진하는 등 원전사업이 활발

국가	최근 원전 정책 동향
 영국	• '50년까지 최대 8기 추가건설('21년 6.8GW→'50년 24GW) • 총 전력생산 중 원전 비중을 현재 15% 수준에서 25% 확대
 벨기에	• 원전 2기에 대한 계속운전 기한을 기존 '25년에서 '35년으로 연장
 미국	• 원전을 CFE(Carbon Pollution Free Electricity) 포함, 원전 지원 확대 • 노후원전 조기폐쇄 방지를 위해 60억불 배정 • Nuscale社 SMR 개발에 총 13.6억불 지원계획
 프랑스	• '50년까지 신규 6기 건설 + 추가 8기 검토(현재 원전 비중 66%)
 폴란드	• '43년까지 6기 건설(원전 비중 약 10%)
 체코	• '40년까지 최대 4기 추가 건설 추진(원전 비중 36%→46~58%)
 핀란드	• 신규 1기 가동 개시, 가동원전 2기 계속운전 추진
 일본	• 원전을 재생e와 함께 에너지 안보 공헌, 탈탄소 전원으로 적극 활용

- ②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금년 6.30일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연료가격 폭등, 에너지안보 등으로 많은 국가가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는 등 원전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음

* 세계 원전 발전설비량이 '20년 415GW에서 '50년 812GW로 2배 증가 전망

- ③ 유럽의회의 EU Taxonomy도 원자력의 친환경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기여와 녹색 투자의 대상으로의 인정을 의미함

- 특히,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상승, 천연가스 수요 불균형 등 “에너지 안보”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재조명
- EU 차원에서 러시아 등 외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

- ④ 특히, EU 택소노미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 사고저항성 핵연료 등이 실현불가능하고, 원전포함이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 핀란드는 '16년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건설에 착수하여 '24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스웨덴은 지난 1월 처분장 건설을 허가, 프랑스도 올해말까지 처분장 인허가 절차 착수를 계획 중

* 확보부지 : (핀란드) 올킬루오토, (스웨덴) 오스타마르, (프랑스) 뢰즈·오프마른 인근

- 사고저항성 핵연료는 미국,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상용화를 목표로 활발히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주), 원자력연구원 ATF 조기 상용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17.11월)하여 핵심기술 및 시작품 개발 등을 지속 추진중

- 우리나라도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의 공론화를 거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통해 이미 처분장 확보와 관련된 일정과 절차, 기술확보 등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이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

□ 또한, RE100과 관련하여 향후 국내 생산제품들이 수출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 국내 총 21개 RE100 가입기업의 전력사용량(약 25TWh)은 금년도 재생에너지 발전 예상량(약 44TWh)의 57% 수준으로 문제가 없음

-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난해 RE100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임

* ①녹색프리미엄 및 자가발전설비 인증('21.1월), ②제3자PPA('21.6월), ③REC거래시장 개설('21.8)

- 또한,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RE100 참여·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생 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보다 수월하게 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 RE100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면서,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급 확대와 비용인하를 유도하고, RE100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컨설팅, RE100 이행 지원, 인센티브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 문의 : 원전산업정책과 김규성 과장(044-203-5320) / 조성경 팀장(5316)